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2~3면

경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 4~5면
중국발 위기의 한국 경제 영향 6면

노동의
소외는
무엇인가?
7~10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11면

역사
관동 대지진 100년 12~13면
KAL기 격추 사건 40년 14면



핵 폐수 투기 공범

핵 폐수 투기를 = 중단하라 =

관련 기사 2~3면

핵 폐수 방류 시작

기시다와 윤석열, 환경과 안전에 완전 무신경한 자들

장호중

기시다 정부가 끝내 핵 폐수 방류를 시작했다.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 계획은 실제로는 훨씬 길어질 것이다. 핵 폐수 발생의 원인인 연료봉 잔해 제거 작업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호기의 연료봉 잔해를 모두 제거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때까지 핵 폐수는 계속 추가될 것이다.

핵 폐수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될지도 알기 어렵다. 도쿄전력은 수많은 문서와 그럴싸하게 편집된 영상들을 배포해 매우 정교한 작업이 이뤄질 것처럼 보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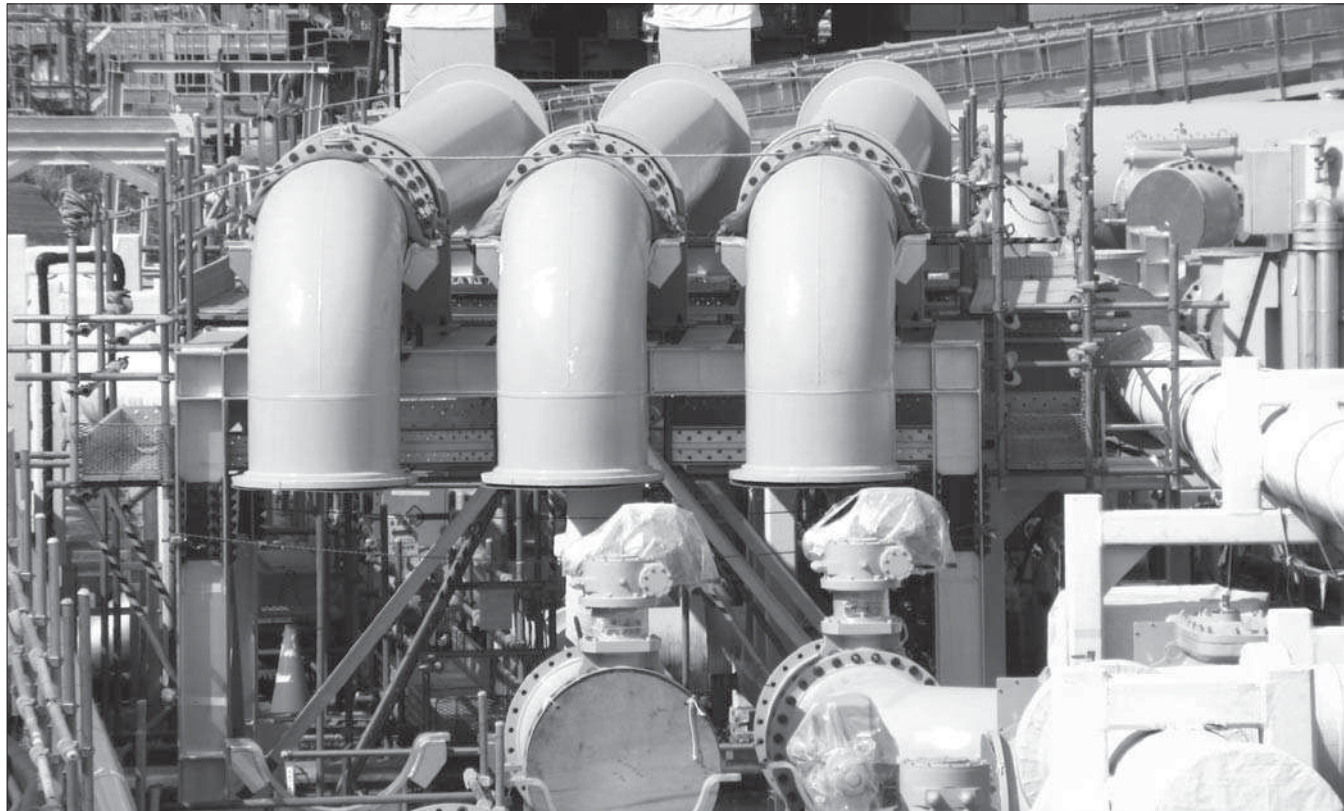
12년 전에도 그랬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자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일본 정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피폭 위험 때문에 사람이 작업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첨단’ 장치들은 무용지물이 됐다.

현장에서 허둥지둥하며 임기응변을 하는 동안 도쿄전력 경영진과 일본 정부 관료들은 실수와 무능을 숨기려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선택을 했다. 조기에 바닷물을 부어 압력용기를 식혀야 한다는 주장을 묵살하고 상황을 은폐한 것이다. 바닷물을 부으면 발전소를 재가동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훗날 암으로 사망한 당시 현장 책임자는 “제어를 잃은 원전이 왜 진정됐는지 결정적 요인은 모른다”고 털어놨다.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순전히 운이었다는 뜻이다.

핵 폐수에도 엄청나게 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핵 폐수 해양투기 과정은 두터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사고 현장은 출입이 통제돼 있고, 지하 터널을 거쳐 수심 10미터 아래로 방류되는 폐수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가 없다.

쇼즈가가와 가쓰미(小豆川勝見) 도쿄대 대학원 조교(환경분석화학)는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도쿄전력이 정말 기준을 지키는지 외부



핵 폐수 방류 설비, ‘옆지른 물은 주워담지 못한다’

에서 검증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거짓말쟁이들

IAEA는 안전성 감시는커녕 일찌감치 2013년부터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를 권유한 당사자다. 알프스의 성능은 검증하지도 않았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투기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도 않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요청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 한 가지는, 실수 혹은 고의로 방사성 물질이 대량 포함된 오염수가 방류 터널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2014년에 핵 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숨기다가 들통난바 있다. 2021년에는 후쿠시마에 또다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고장난 지진계를 방치해 왔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이나 핵폐기물 자체가 대량으로 배출되더라도 알 길이 없다. 이를 감시하는 것도 사실상 도쿄전력 자신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IAEA가 핵 폐수 방류를 위해 한 일을 고려하면 이를 제대

로 감시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일본 측에 오염수를 가열해 증발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 중 삼중수소만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고 다른 방사성 물질은 지상에 남기기 때문이었다. 기시다 정부 발표대로 알프스가 삼중수소만 제외하고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면 같은 결과를 낼 테니 그렇게 해 보라는 것이다. 기시다 정부는 간단히 무시했다.

도쿄전력과 IAEA는 한국 측 전문가가 상주하게 해 달라는 윤석열의 제안도 거절했다. 대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자신들이 보여 주는 자료와 말만 믿으라고(정기 화상회의)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과정이 “과학·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며 방류를 사실상 지지했다.

일본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긍정적으로 말해 준 것이 컸다” 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JTBC 8월 24일 자)

한패

국무총리 한덕수는 일본 측에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

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나 마나 한 소리다. 30년은커녕 12년 전 사고의 책임도 못 지겠다고 핵 폐수를 바다에 투기하고, 8년 전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자민당 정부다.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절당한 낮 뜨거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외교부 장관 박진은 상주보다 방문이 더 효과적이라는 궤변을 폈다. IAEA 소속으로 상주하면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 왜 애당초 상주하겠다고 했을까? IAEA의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어 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더니 이제는 IAEA ‘소속’으로 상주하는 것이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주마다 하기로 했다는 정기적 방문은 “제대로 검증하도록 허락해 줄 리도 없어 보이고 의지도 없으리라 우려됩니다. 지난번 파견한 ‘검증단’의 행적을 보며 짐작이 갑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제 나라 아파트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감시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 멀리 후쿠시마현에서 도쿄전력이 바다에 뭘 내다 버리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는가.



김미영 기자

갈수록 핵발전, 핵무기에 기대는 세계 지배자들

최소 30년 이상 계속될 방류는 온갖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아직까지도 전혀 그 성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알프스가 실제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30년 동안 제대로 가동되는 정수기가 있다는 말도 믿어지지 않는다.

기계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위험 요인은 널려 있다. 애당초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지진이 다시 일어나거나, 기후 위기의 효과로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이 복잡한 장치들을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일본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제2의 후쿠시마 핵 참사를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핵 폐수를 방류하는 기시다와 이를 적극 지지한 바이든, 윤석열은 이 정신 나간 짓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긴급한 필요를 상호 지지함으로써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더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핵발전소 증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여긴다. 중국은 55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2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선포한 8월 18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회의가 된 이유다.

NHK는 당시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에 미국이 지지와 이해를 표명한 데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진적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 하고 말해 사실상 방류를 지지했다.

한·미·일 세 국가가 다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리려 한다.

미국은 조지아주에 건설한 보글 3호기를 최근 가동하기 시작했다. 보글 4호기도 짓고 있다. 바이든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거나 이미 폐쇄된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데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그의 ‘100퍼센트 청정에너지’ 계획은 기후 위기를 멈출 수 없을 뿐 아니라 핵발전을 늘리는 정책이다.

핵무기 경쟁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침체된 핵산업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기시다의 지난해 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을 발표해 핵발전소 신규 건설, 수명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핵 폐수 매립이나 가열·증발 등 여러 선택지 중 그냥 바다에 투기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니다. 기시다 정부는 최근 새 이지스함 건조 계획을 밝혔는데 그 비용이 한 척에 4조 원가량이다. 핵 폐수 처리를 위해 고려한 여러 방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훌쩍 뛰어넘는다.

윤석열 정부도 신한울 2호기와 새울 3~4호기를 짓고 있다. 추가 건설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신고리 2호기를 비롯해 조만간 수명이 다 되는 10기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도 추진한다.

제국주의와 친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핵발전소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원이자 핵무기의 원료 공장이자 핵무기 기술의 보고다.

모든 핵발전소에서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일본은 플루토늄 농축을 위한 핵심 시설인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롯

카쇼무라에 있는 재처리 설비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공장이나 다름없다.

훗날 일본 정부는 여기서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후쿠시마의 선례를 따라 바다에 투기하려 할 수도 있다.

한국의 역대 정부도 핵무기 원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박정희 시절만이 아니다. 1982년 4~5월에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다 적발됐고, 2000년에도 서울에 있는 한국원자력에너지연구원에서 순도 98퍼센트의 플루토늄 700밀리그램을 추출했다가 IAEA에 적발돼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미국의 기밀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재처리 기술 중 하나인 파이로프로세싱을 허락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증거 인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은 매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2021년 8월 11일, 2022년 8월 16일, 2023년 4월 19일에 미국은 ‘미니트맨 3’ 발사 시험을 했고, 30분 내에 아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이 너무 느리다며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은 핵발전 확대와 핵무기 기술 개발을 망놓고 하지 못하게 막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다. 기시다·윤석열·바이든은 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 핵산업 진흥을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된 IAEA도 그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핵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지배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방사선 노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

핵 폐수 방류 시작됐지만 반대 정서와 운동은 여전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핵 폐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기시다의 최종 순간까지 일본 어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도 방류를 강행했다.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방류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핵 폐수 방류와 동시에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자 일본 어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80퍼센트가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당과 환경단체들, 정의당, 진보당 등이 반대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24일에는 일본 대사관에 항의차 진입하려던 청년들을 경찰이 연행하기도 했다.

이 청년들의 항의 행동은 완전히 정당하다. 한일 양국의 평범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 생태계에 커다란 짐을 지울 핵 폐수 방류는 중단돼야 한다.

핵 폐수 방류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패퇴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당연히 총선에서 여당을 패퇴시켜야 한다.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삶을 더한층 후퇴시키는 술한 악행들을 더욱더 저지를 것이다.

그러나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 폐수 방류가 무모한 결정이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 이후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 그러면 운동이 다시 성장해 방류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민간 금융기관(소위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또다시 구제책을 내놓았다. 8월 21일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1조 5000억 위안(275조 원)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0.1퍼센트포인트 인하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개발 수익을 주된 세수로 삼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부양에 이해관계가 있다. 지방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지방정부융자기구'(LGFVs)를 세웠고, 중통국제신탁 같은 민간 금융기관이 지방정부융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 자금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부도 위험이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이번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 국제금융센터의 추정치에 따르면, 지방정부융자기구의 부채 총액은 60조 위안이고 지방 중소은행의 대출이 38조 위안이며, 그중 부실채권은 5조 위안이 넘는다고 한다. 나머지 22조 위안은 "그림자 금융"에서 제공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방정부융자기구의 부채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총 부채(23조 달러)가 중국 국내총생산(17조 달러)을 웃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형다와 비구이위안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민간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고 있고, 지방정부융자기구의 부실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지방정부에 고작 1.5조 위안의 구제금융을 제공하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의도적 파산?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국유 부동산 기업을 키우려고 의도적으로 형다와 비구이위안의 파산을 초래했다는 주장(일종의 음모론)을 펴고 있다.

이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중국 경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래서 최근 시진핑이 국가 관료들에게 "인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자신감의 발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완전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진 출처: GovernmentZA(블라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 시진핑은 진퇴양난이다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물론 중국 지배관료들은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 시진핑 정부는 철강, 시멘트 등 과잉생산 위기가 두드러진 부문을 구조조정 했다. 철강기업의 경우, 부도 위기에 빠진 민간 기업들이 국유 기업에 인수됐고, 한 성(省)당 하나의 국유 철강기업으로 재편됐다.

또,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중국제조2025'를 통해 중국 경제를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거품이 발생할 정도로 비대해진 부동산 부문에서 자원을 빼내 첨단 산업으로 돌려야 했다.

2020년 초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부동산 부문의 구조조정이 잠시 연기됐지만, 같은 해 8월 시진핑 정부는 세 가지 레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부문의 거품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에서 국가 통제 부문의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이 관료들의 뜻대로만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관료들도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부실에서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중국 지배관료들의 대응은 '묻지마 대출'로 알려진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었고,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이 수익성이 낮은 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흘러갔다. 지방정부 관료들도 정치적 출세를 위해 지방정부의 GDP를 높여야 했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거품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 중국 제조업의 수익성 하락, 시중의 많은 유동성, 지방정부 관료들의 이해관계 등과 같은 중국 경제의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의 환부(부동산 거품)를 제거하려고 어쩔 수 없이 칼을 꺼내들었지만, 이 수술이 원하는 효과를 내기보다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시진핑은 전과 같이 부동산 거품을 내버려 둘 수 없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부동산 기업을 구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인내하라'는 시진핑의 지시는 그의 자신감이 아니라 사태의 포로가 된 처지를 잘 드러내는 말이다.

사태의 포로가 된 시진핑 정부

시진핑을 포함한 지배관료들에게 부동산 거품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산업 전반이 부진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저성장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도 제조업 부진을 겪고 있다. 또, 농민공의 고갈과 노동비용 증가 등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베트남이나 인도 등지로 이전해 갔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고 내수 경제를 키우려 하지만, 노동비용을 포함한 생산비용을 낮춰야 하는 압력과 갈등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첨단 산업으로의 경제 재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 속에서 2012년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은 동아시아와 세계 전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더 첨예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중국 지배관료의 대응은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부문은 약진하고 민간부문은 후퇴한다)로 표현된 국가자본주의 강화였다. 최근 시진핑이 표방한 공동부유도 이 노선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 강화로 첨단



Z605115097

제조업 수익성 하락, “그림자 금융”, 성장 지표에 매몰된 관료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난점은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중국의 불행은 미국의 행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는 것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더 높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윤율이 더 하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대응을 보면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서방과 본질이 똑같은 자본주의 체제이고 경제 위기의 근원이 이윤을 저하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경제를 두고 “40년 호황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사실 근래 들어 중국 경제는 성장 목표치 달성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제 중국 경제는 몇 년 전의 고속 성장에 비해 반토막도 되지 않을 2~4퍼센트의 성장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영국 컨설팅 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퍼센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중국 지배관료들은 경제적 번영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몰락하지는 않을지라도) 저속 성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배관료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 빈부격차 확대, 일자리 감소, 실업자 증대 등에 대한 반대가 나타날 수 있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바라고 복지 축소와 연금 삭감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

8월 22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경제 단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춰 미국은 중국 기업 27곳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선물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반도체, 2차전지 등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했고, 대 중국 첨단 장비 수출을 막았다. 중국도 반간첩법을 통해 미국과 연계된 산업 스파이 색출에 나서며 맞불을 놓았다.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두고 양국 간 긴장이 일시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이 본질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가 미국에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 투자와 무역 등 서로 깊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주들이나 국가 관료들은 중국 경제의 완전한 파산보다는 중국이 자신들이 설계해 놓은 제국주의 질서(이른

바 글로벌 스탠다드) 속에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중·미 간 경제적 관계가 군사적 갈등과 전쟁을 억제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제1차세계대전 직전 영국과 독일의 관계가 보여 주듯이, 경제적 연관성이 높다고 해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지배관료들도 미국의 이런 의도를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중국 경제가 세계 2위로 성장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자본들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 중국 지배관료는 중국 자본의 뒷배 구실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이런 압력은 경제적 경쟁을 넘어 정치·군사적 대결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경제 위기로 난관에 봉착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시 주석이 중국 국민에게 공동 번영을 줄 수 없다면 대만을 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적 경쟁을 격화시켜 정치·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중국의 디플레 위기

중국 경제에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0.3퍼센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생산자물가지수도 4.4퍼센트 하락해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은 생산재 수요가 부족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생산 자체의 축소와 일자리 감소 더 나아가 공장 폐쇄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완만한 인플레이(임금의 가치 하락)보다 디플레(실직으로 임금 소득의 소멸)가 노동자 대중에게 더 끔찍한 일이 된다.

최근 중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부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부도 위기 등으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디플레 현상이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산업 생산 자체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지와 디플레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전의 높은 성장세에 비해 저성장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계급투쟁을 더 많이 촉발할 것이다.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칠까?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 온 나라 중 하나였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덕분에 1997년 IMF 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대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가 누려 온 이런 행운이 지속되기 어려움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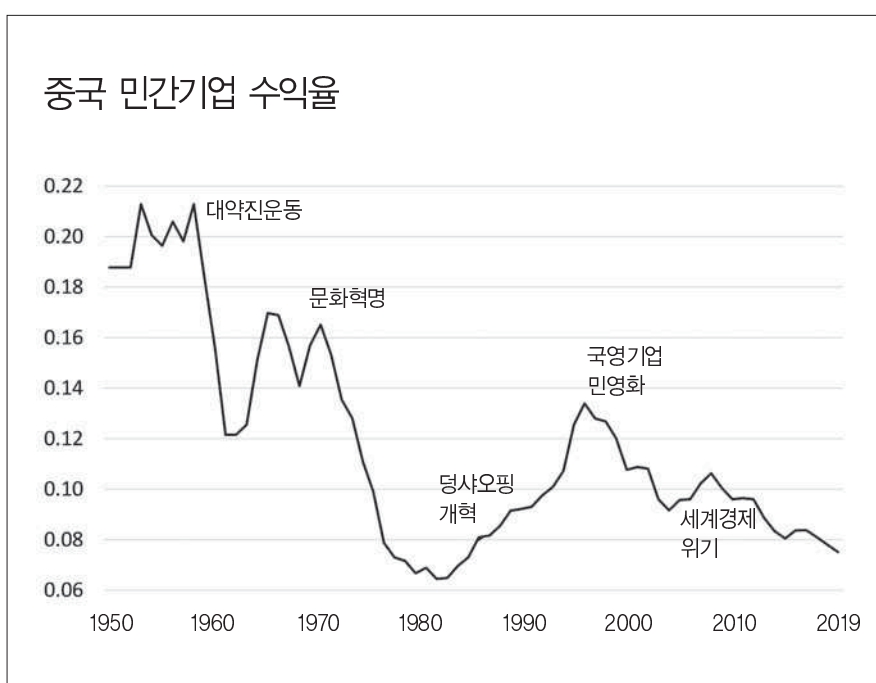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위기와 이에서 파급된 금융권의 위기는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까지 중국이 추구해 온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0년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실물 경제의 성장 추세는 점차 둔화해 왔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런 성장률 둔화를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말하며 중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으레 겪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에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다. 즉 기업들의 경쟁 압력 속에 자본 축적이 진행되고, 기계 등 불변 자본에 대한 투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성장률을 추세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중국 경제도 세계적인 경쟁 압력 속에서 자본 축적을 강화해 왔고, 위 그래프에서 보듯 이윤율 저하의 문제를 겪어 왔다.(마이클 로버츠가 추산한 중국 민간기업 이윤율) 이는 흔한 오해와 달리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이고, 다른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근본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어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들며 중국의 수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과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높이려 해 왔다. 그래서 1997년 중국 GDP의 10퍼센트가 되지 않던 부동산 부문의 비중이 현재는 25퍼센트가량으로 치솟았다.

부동산 거품이 커져 온 결과 세계에서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10곳 중 5곳이 중국 본토의 도시이다. 집값이 가장 비싼 선전에서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80년을 모아야 평균적인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부자들은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 줄 수 있다. 부동산 거품은 갚지 못



할 부채의 증대로 경제 위기의 씨앗이 될 뿐 아니라 불평등의 증대로 사회적 불안정을 낳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을 유도해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최근 벌어지는 상황은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동산 부분은 중국 경제의 더 큰 부분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회사채의 65퍼센트가량이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고 있다.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중 부동산 관련 업종의 비중이 45퍼센트에 달한다. 중국의 비금융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60퍼센트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인데 부동산 거품 하락은 더 많은 기업들의 위기로 파급될 수 있다.

또 이제까지 지방정부들의 재정 수입의 절반가량이 토지 판매 수익이었던 만큼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확산될 것이고, 이는 GDP의 6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지방정부융자기구의 부채 위기로 파급될 공산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내버려둘 수도 없고, 꺼트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최근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중국 경제 위기에서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열심이다.

얼마 전에도 국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 상태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우리 경제에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위기가 불거진 직후 원화 환율이 급등한 것만 봐도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 불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 자본이 유출되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국내외 여러 금융 기관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낮춘 데 이어 한국경제연구원도 1.3퍼센트로 조정했다.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한국은 중국의 부동산과 설비투자 침체로 인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중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다. 중국 부동산 침체는 건설에 필요한 굴삭기 등 한국의 기계 장비류와 철강 부품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설비투자 침체도 한국의 관련 수출 산업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째 감소 추세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 반도체 가격 하락과 함께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중국 경제 침체로 인해 정부가 상반기부터 강조했던 상저하고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한국이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중국 경제의 위협으로부터 “디리스크”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

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위기를 보도하며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이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한국 지배자들이 중국 경제와 거리를 두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한국 자본가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은 최근 소비가 회복세이고 이 때문에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은 상당히 늘었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은 위축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소비 성장세도 꺾이고 있다는 보도가 많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퍼센트 대에 불과하다. 중국보다 더 낮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지배계급 내 다수는 한미일 동맹 강화에 힘을 실으면서도 여전히 중국 시장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조선일보>는 “한·미 관계 강화를 한·중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미국은 올해 10월 만료 예정이던 한국과 대만 기업의 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며 이런 틈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난제

그러나 경제 위기와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될 수록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도 더 심화될 공산이 크다. 위기 속에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더 첨예해지고, 각국의 지배자들이 국내에서 커지는 불만을 상대국의 탓으로 돌리면서 내부 결속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지배자들은 더한층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중국 경제 침체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지배자들의 처지는 세계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의 정도를 보여 준다.

결국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지배자들도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에게 고통 전가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연일 긴축을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 등 서민층이 생활조건 후퇴를 받아들이라는 엄포일 것이다. 각국에서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에 맞선 저항이 성장해야 한다.

정선영

마르크스주의의 방법 (1)

노동의 소외



토론회 영상 보기
https://bit.ly/marx-method-1

아래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 간사 **최일봉**이 '마르크스주의의 방법' 시리즈 강연의 첫 번째 주제로 마르크스의 소외론에 관해 8월 23일 노동자연대TV를 통해 한 발제의 원고를 게재한 것이다. [] 안의 말은 시간 제약으로 실제 TV 발제에서는 생략된 부분이다. 다만 마지막 첨언은 일부 시청자 질문에 대한 못다 한 답변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소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소외는 파도림이나 배제가 아니고, 소외감이라는 느낌도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객관적 조건을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자기와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데 묶어 **노동계급**(또는 프롤레타리아)이라고 합니다.

노동계급 사람들이 자기 노동력을 판매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개인 자본가나 국영 기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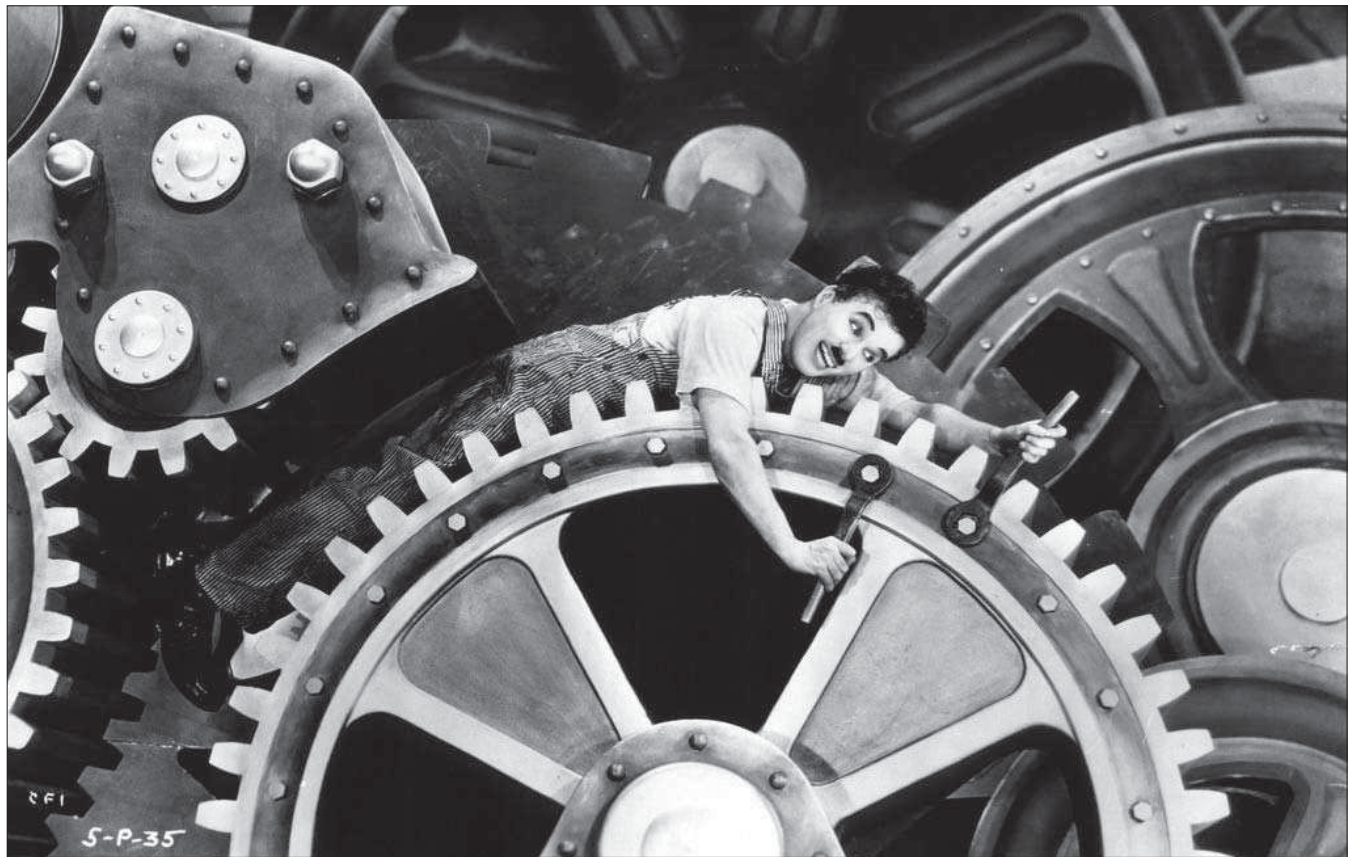
노동계급 가운데 이력저력 고용된 사람들을 두고 노동자(또는 임금 노동자)라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에게 생산수단이 없어서 노동자들은 자기의 노동 생산물은 물론이고 **노동 자체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는 **노동의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할 주제는 바로 노동의 소외입니다. 노동의 소외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왜곡된다는 점도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세계 사이의 관계도 노동의 소외 때문에 왜곡된다는 점도 논의할 것입니다.

헤겔과 달리 마르크스처럼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자본주의 사회**에, 그리고 **노동**에 초점을 맞춰 소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소외론의 출발점을 초역사적으로 역사 일반에 걸쳐, 또 노동계급을 넘어 인류 일반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소외가 유의미한 마르크스주의적 방법 구실을 못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발제 후반부에서 좀 더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마르크스가 소외에 대해 한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동의 소외를 탁월하게 표현한 <모던 타임스>(찰리 채플린 주연·감독)의 한 장면

소외된 노동과 그에 대한 반응

역사 전체에 걸쳐 인간은 자연을 대상으로 노동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재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인간은 서로 협동하는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과정이라고 합니다. 노동과정은 인간 삶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노동은 생경한, 낯선 외부 세력인 자본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동도 낯설고 생소한 것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지 살기 위해, 그저 생활수단을 얻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사람

들의 일은 더는 그의 삶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용자들은 경쟁과 효율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더 적게 주고, 더 빠르게, 더 열심히, 더 오래 일 시킵니다. 자기 일에 대한 통제가 적은 일자리일수록 저임금이기 쉽고, 또 저임금 일자리일수록 자기 노동에 대한 통제 여지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갈수록 노동과정은 더 조각나고 더 작은 작업 과정들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적 재능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돼 버립니다. 경직되

게 반복되는 일을 하는 기계 말입니다. 노동자의 일은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말한 “추상적 노동”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20세기 초·중반의 저명한 좌파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주연하고 감독한 <모던 타임스>라는 위대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영화는 노동자가 어떻게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되는지를 잘 묘사한다. 유튜브나 티빙에서 스트리밍 되고 있으니 꼭 보기를 권한다.]

오늘날에는 노동의 소외가 훨씬 확장됐습니다. 가령 콜센터 일도 [<모던 타임스>가 상연된 1936년의] 공장 일과 비슷하게 소외됐습니다. 기후 위기도 노동 소외와 관련 있습니다. 기후 재난으로 주로 노동계급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노동자들은 기후 재난을 갈수록 악화시키는 탄소 배출 많은 생산 방식과 생산물에 관련돼 있습니다.

교사의 일도 자본주의 이전과 다릅니다. 오늘날 교사의 일은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생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사의 노동은 소외됐습니다. 무슨 의미로 교권을 말하는지는 흔히 모호하지



오늘날 많은 일들이 공장 일과 비슷하게 소외됐다. 콜센터의 광경

▶ 8면으로 이어짐

▶ 7면에서 이어짐

만, 교권 운운이 교사가 자기 일에 대한 통제력이 없어 힘을 잃은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노동이 소외돼서, 인간 삶의 기본적인 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돼야 하는 노동이 인간이 견뎌 내야 하는 부담이 돼 버렸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원자화되고 고립돼 있다고 느낍니다.

노동자는 성취감을 주는 창의적인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개성을 표현할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얼굴 없고 힘 없고 교체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직장 밖에서는 집을 꾸미고, 맛집을 찾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거나 호프에서 술 마시고,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경기 관람, 패션 등을 통해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다지 개성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성 충만한 개인들인 유명인들에게 사로잡히는 이른바 '셀럽 문화'가 광범합니다. 그러나 셀럽 문화에 집착하는 것은 내 개성도 중요하고 주목할 만하다는 환상과 현실도 피적 동기를 제공할 뿐입니다.

소외 현실로부터의 가장 뚜렷한 도피 사례는 히키코모리입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히키코모리가 빠르게 늘었는데요, 히키코모리 생활도 소외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삶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정서의 발로인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 건강 문제, 특히 우울증 등 만성불안장애도 소외에 대한 반응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무의식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소외가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형태의 반응들과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가령 자해 문제를 들어 보면, 자해 행위를 통제 부재의 세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듯한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확실한 방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매우 안쓰럽게도 말입니다.

사례 하나만 더 들자면, 노동자들이 매우 보수 우익적인 관념들, 예컨대 성차별, 인종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을 지지하는 것도 소외에 대한 반응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이는 반동적인 형태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노동할 기회도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경쟁에 내몰린다. 그 경쟁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

소외, 불평등, 경쟁

노동자들은 소외에 의해 노동과정만 통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노동 생산물도 생경한, 외부적인 것이 됐습니다. 상품은 노동자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사용자와 자본가의 재산입니다.

생산물은 더는 노동자의 직접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고 그저 이윤과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노동자들이 만들었지만 노동자들은 그중 일부라도 구하려면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급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만든 아이폰 14를 자기 임금으로 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보다는 사치스러운 대저택이 지어져 많은 노동계급 가구들은 전·월세를, 그것도 종종 반지하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또 영화 하나를 강력하게 추천하고자 한다. 바로 <기생충>이다. 그 영화는 대저택을 소유한 부자들의 삶과 반지하세입자들의 삶을 대조하며 블랙 코미디 스타일로 묘사한다.]

노동의 소외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그래서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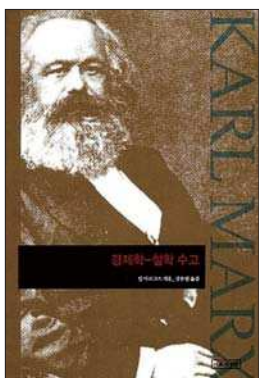
자신의 노동 생산물은 물론이고 자신의 노동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 노동할 기회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것

인데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일도 내 맘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일을 자기가 통제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직장을 구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자리를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일 통제 여지는커녕 이 일자리 저 일자리 가릴 계제가 아니고 그저 일자리 얻기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서로 경쟁합니다. 결국 노동의 소외는 노동계급 사람들 사이를 소원케 만듭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해득실을 따져 다른 사람을 봅니다.

사회의 경쟁은 이미 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외는 교육에도 침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시험에 나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도 성적처럼 수량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경쟁자로 여기도록 교육받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를 재어 보고야 친구 관계를 맺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돼서까지 줄곧 상품처럼 평가 받아야 하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우리는 서로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원해졌습니다. 갈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계급 소외 차별



과 독점자본



경제학-철학 수고

칼 마르크스, 이론과실천, 228쪽, 11,000원

계급, 소외, 차별 중 '마르크스주의의 소외론'

주디 콕스 외, 책갈피, 344쪽, 15,000원

마르크스의 생태학 - 유물론과 자연

존 벨라미 포스터, 인간사랑, 540쪽, 25,000원

노동과 독점자본

해리 브레이버먼, 까치, 392쪽, 9,000원



사진 출처 U.S. Forest Service

기후 위기도 노동 소외와 관련 있다. 노동자들은 기후 재난을 악화시키는 생산 방식과 생산물을 통제하지 못한다

인간 본질 왜곡과 기후 위기

이제 노동의 소외는 인간 본성(본질)을 소외시킨다는 점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추상적인 인간 본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이 역사 속에서 변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본성에 고정불변의 특징들이 있음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일반적인 인간 본성과 역사적 시기에 따라 변화된 인간 본성을 구별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 본성, 즉 인간 본성의 한결같은 측면은 의식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협동적 노동을 한다는 점이라고 마르크스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이익이나 관심사와 별 관련 없고 그저 노동자 개인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유적 존재”라고 부른 인간 본성은 멀어지고 순전한 개인으로서의 추상적 인간 본성만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 본성으로부터 소외됐다고 했고, 뒤집어 말해서, 인간 본성이 소외됐다고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앞서 논의했듯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그저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고,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종종 “임금 노예”라고도 불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창조적이지

도 않고, 개인적 의향이나 성향과도 별 관련 없어 개성도 없습니다. 판에 박힌 형식적·의무적·습관적 행위입니다.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으로서 노동, 즉 인간 본성은 자본주의적 생산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소외는 자연의 소외도 부릅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노동과정과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노동의 대상인 자연으로부터도 소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이 노동자에게 낯설고 통제불능의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개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뜻이요, 이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대사(代謝), 즉 신진대사가 불균형해지고 불균등해진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미국 마르크스주의자 존 벨라미 포스터는 이를 “대사의 균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의 소외가 대사 균열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대사 균열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그러나 존 벨라미 포스터가 보여줬듯이, 일찍이 한 세기 반 전에 바로 마르크스가 기후 변화의 원천인 인간과 자연 사이의 대사 균열에 관해 이미 심각하게 논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균열이 자본주의 때문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기후 혼돈을 끝내려면 결국 자본주의를 끝내야 합니다.

노동의 소외를 농친 철학자들

발제 앞부분에서 저는 소외를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노동생산물과 관련된 그들의 객관적 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을 경우의 난점들을 발제 후반부에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치당원이 되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도 소외 문제를 다루지만 순전히 철학적으로 다룹니다. 1927년에 출간한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저작 《존재와 시간》에서 “퇴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실존주의적으로 다루는데,

심지어 소외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와 1950년대에 알베르 카뮈와 장폴 사르트르 같은 프랑스 실존주의자들도 소외 문제를 다루는데, 그들도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빠뜨린 채 단지 철학적 논의만을 하다 보니 소외를 이른바 “인간의 조건,” 그것도 극복 불가능한 조건으로 다룹니다.

▶ 10면으로 이어짐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paper_org

노동자 연대 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엔크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인필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5

▶ 9면에서 이어짐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의해 소외된 노동에서 출발해 인간의 예속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실존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의해 소외된 노동이라는 역사적 특수성 없이 철학적 논의를 통해 인간 예속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존주의자들은 노동자의 객관적 소외에 근거하지 않고 노동자의 '자기 소외', 즉 주관적 소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도 1958년에 발표한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프랑스 실존주의자들과 매우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자기 소외'에 대해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렌트는 마르크스가 자기 소외, 주관적 소외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뮈든, 사르트르든, 아렌트든 소외를 둘러싼 오해를 했다는 이유로 간단히 폄하하고 일축할 철학자들은 아닙니다. 사르트르처럼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아렌트처럼 자유주의자였던 어쨌든 그들은 종종 정치적으로 좋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다만, 마르크스의 소외론에 대한 그들의 오해는 소외를 극복할 효과적인 전략으로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독일 망명객 마르크스주의자 에리히 프롬도 소외 문제를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프롬은 (본지 기본입장처럼) 소련을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보았고, 공산당들의 소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짜 마르크스주의로 규정하며 그것을 레닌·트로츠키의 마르크스주의와 대비시켰습니다. 프롬은 또한 주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프롬의 마르크스주의와 소외론에는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인 **계급**과 **계급투쟁**의 역할이 누락돼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를 명시적으로 자처했음에도 프롬은 계급과 계급투쟁 대신에 **개인**과 **주관성**에 초점을 맞추느라 그만 노동계급이 객관적으로 직면하는 소외에 관해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의 반핵·반전 정치는 좌파적 포퓰리즘 경향을 띠며 미국 민주당의 '진보파' 정치인들과 동행하는 (불모의)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소외를 낳는 객관적 현실에 도전하는 투쟁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자신도 소외를 극복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소외의 극복

이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뉴레프트가 등장해 소외에 대해 얘기하던 1960년대에 그런 영향을 경계한 공산당들은 소련 블록에 속한 사회에도 객관적인 노동 소외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 등 공산당 철학자들은 소외라는 주제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소외론은 마르크스 젊은 시절의 헤겔주의 잔재에 불과하다며 말입니다.

그러나 소외의 효과와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면, 소외의 객관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의 중요한 일부로서 소외론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소외론에 기초해야만 오늘날의 수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외에 대한 특수한 반응들로서 말입니다.

앞에서 저는 소비주의나 우울증 증가 같은 사례를 들었지만, 학교 폭력이나 무차별 흉기난동 범죄 등도 소외에 대한 특수한 반응들입니다. [소외 때문

에 누구나 흉악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 특정 흉악 범죄자가 그렇게 되기까지 자란 환경과 경험, 실천 등으로 형성된 그의 심리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설명할 때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소외**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장 역사 전반에서 나타난 소외나 인간 일반의 소외에 기초한다면, 그런 논의는 추상적이 되거나 현상 묘사에 불과하기 십상입니다.

또한 소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 정치적 결론은 개혁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라이프스타일 바꾸기처럼 도덕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자기계발처럼 개인주의적이기 십상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소외에 기초한다면 부차적으로 심리학, 역사학, 문학, 철학 등의 도움을 받아 소외론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외에 대한 극도로 다양한 반응들 중 안타깝거나 불건전한 많은 것들이 사라지려면 노동의 소외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노동은 생명의 자유로운 발현이 되고 인생의 즐거움이”(마르크스)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동계급이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를 해체하고 생산 수단과 생산 방법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강조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이 말로 제 발제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소외로 무력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런 낮은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소외 현실을 폐지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현실의 노동운동은 통제 불능의 객관적 상황을 통제 가능한 객관적 상황으로 전면 변모케 할 능력

은커녕 그걸 점진적으로 개선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파업 참가 노동자 가운데 노동자들이 시스템 변혁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다. 좋은 발상이긴 해도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노동쟁의가 개별 일터의 문제들에 국한될수록 강화된다.

그리고 대위기가 엄습해도 시스템을 붕괴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지배자들은 자기네의 지배가 아무리 모순돼 있어도 그 지배가 그냥 무너지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각이 변화한다. 대규모 파업과 대규모 거리 시위를 경험하면 적어도 그 일부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이 실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트로츠키는 이런 동력을 이렇게 묘사했다. “대중이 혁명 안으로 빨려 들어올 때 미리 준비된 사회 재구성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구체제를 견뎌 내기 힘들다는 참예한 감정을 갖고 그러는 것이다. 계급의 길잡이층만이 정치적 기본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조차 사태의 검증과 대중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혁명의 근본적인 정치 과정은 계급이 사회의 위기에서 비롯한 문제들을 점차 파악하는 데 있다. 그것은 연이은 근사치 계산법에 따른 능동적 지향성인 것이다.”

물론 이 방향으로 대중이 학습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동적이지는 않으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혁명가들이 한 스텝 한 스텝마다 관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 발제의 범위를 넘는 얘기다.]



마르크스주의의 방법

소외, 역사유물론, 변증법
최일봉 지음, 노동자연대, 71쪽, 3,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한미일 정상회의의 '원칙'과 '정신'

한미일 협력 강화는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에 스스로 말려드는 것

8월 18일(미국 현지 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려 세 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예상대로 그 회의는 한미일의 협력 구조를 체계화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높였다. 한국은 그 “범지역 협력체”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일본과 보조를 맞추게 됐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했다. 중국을 봉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걸림돌의 하나인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고 미국 외교관들이 동분서주했던 까닭이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가 “미국 외교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떠안을 부담과 위험도 커졌다.

8월 21일 윤석열은 정상회의의 성과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 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질 것이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이 줄 것? 누구의 기회?

한미일 정상들은 3자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고, “지역적 도전과 도발, 그리고 위협”이 발생하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이 약속들을 계기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자동 개입 조항과 공동의 사령부까지 있는 나토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할 길이 열렸다는 관측이 많다.

국제법상 의무는 아니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 “협의” 약속으로 한국은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에서 미국·일본의 공동 대응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실상의 “의무”를 지게 됐다. 이런 협의를 통해 “메시지와 대응 조치를 조율”하기로 약속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번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대

목이 있다. 한국이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성명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은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 수입 70퍼센트, 천연가스 수입의 50퍼센트가 가까이가 남중국해를 통해 들어온다.”

지난 3월 국제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 보고서에서, 대만해협 분쟁 발생 시 한국 해상 운송의 30퍼센트가 넘는 해상교통로가 위협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제국주의적 갈등으로 동·남중국해 바닷길이 불안해지면서, 그 바닷길에 의존해 온 한국 지배자들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윤석열의 선택은 사실 위험하다. 한국이 미국·일본을 지원하며 위험한 분쟁들에 직접 연루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차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져 미국의 동맹 체계를 따라 확전된다면, 그 위험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벌어질지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능력의 증대를 경계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진전시켜 왔다. 전략핵잠수함 기항 등 미국 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추진했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와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더 긴밀히 협력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 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3국 군대가 하나의 군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핵무기 전진 배치,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로 한일 양국의 군사 협력도 한 걸음 진전될 것이다. 광복

절 연설에서 윤석열이 일본에 있는 유엔 군사령부 후방 기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향후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목소리와 일본이 관여할 여지도 커졌다.

공급망

윤석열은 이번에 한미일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공조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한미일의 협력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최선진국이 되지 못한 채 주력 수출 분야에서 중국 등 도전자들의 추격을 받는 신세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과 첨단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이득을 얻고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한국 경제가 처한 모순을 더 증폭시킬지 모른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여전히 주요 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런 관계는 국제적 생산 네트워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한 결과로, 단기간에 뒤집히기 어렵다.

중국은 한미일 공급망 협력을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반발과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는 미국의 ‘다리스크’ 시도가 초래할 기존 공급망 교란, 세계경제 불안정

증대와 함께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다.

우려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를 놓고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주로 나오는 비판은 “굴종 외교”를 했다는 비판이다. 국제 질서가 다극화되는 와중에도 미국에 확 기우는 잘못된 선택을 해 ‘국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마침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다고 밝히자, 이 “주권 침해”에 윤석열이 아무 항의도 안 한다는 비판도 추가됐다.

사실 “주권 침해”는 식민지나 반(半)식민지 상태에 있는 나라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오늘날 한국 국가의 위상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나 1965년 한일 협정 때와는 다르다.

윤석열이 그저 “꼭두각시”이거나 “충실한 부하”여서 친미·친일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처한 녹록치 않은 국제 상황에서 한국 지배계급을 위한 나름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외교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즉, 제국주의적 갈등이 악화되는 데 일조하며 평범한 한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은행 위기와 중국 부동산 위기는 양국 경제 모두 구조적으로 꽤 불안정함을 보여 줬다. 그런데 경제 위기는 두 제국주의 국가의 지정학적 갈등이 악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윤석열의 선택이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음이 입증되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

김영익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관동 대지진과 학살 100년

일본 국가가 조선 노동자와 일본 사회주의자의 연대를 파괴하려고 학살을 저지르다

이 글을 쓴 **하세가와 사오리** 씨는 한-일 통번역사이자 인하대학교 의대 박사후연구원이고,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731부대》(2020)의 공역자이다.

올해는 일본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이 발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일본과 한국에서 이리저리한 조사·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것이 많다. 사회주의자들과 관련된 것도 그중 하나다.

1923년 9월 1일 일본을 강타한 관동대지진은 사망자 약 10만 명, 주거 소실자 200만 명이 넘는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재앙이었다. 하루아침에 인구와 주요 시설이 집중된 수도권이 붕괴함에 따라 일본 사회는 혼돈에 빠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조선인이 방화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며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했다.



1923년 9월 1일 대지진이 도쿄 등 관동 지역을 강타해 재앙이 덮쳤다

명백히 일본 국가의 범죄

당시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일본 정부와 군부·경찰은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적극 퍼뜨리고 불안한 민심을 부추겼다.

경찰과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관청인 내무성은 9월 3일 아침 경보국장 명의로 일본 전역의 부(府), 현(縣) 지사에게 해군 무선 송신망을 통해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하고’ ‘폭탄을 소지하고’ 있는 자도 있기 때문에 ‘도쿄부에서 일부 계엄령을 시행했다’, ‘각지에서는 선인(鮮人) 행동에 대한 엄밀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

령을 보내 조선인 단속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각 현청은 지자체에 지시해 민간조직인 자경단(화재나 도난 따위의 재난,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인이 조직한 경비단체)을 만들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경단 대원들은 군부와 경찰의 주도하에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했다.

조선인 폭동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진 후에도 정부와 군부·경찰은 폭동 사실을 날조하는가 하면, 학살 사실을 숨기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악행을 거듭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확인된 조

선인 희생자 수만 6644명에 이른다.

군부와 경찰의 총칼은 일본인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도 겨냥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초기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히라사와 게이시치(平沢計七)와 가와이 요시도라(川合義虎) 등을 포함한 10명이 경찰에 체포돼 사살당했다. 아나키스트 오스기 사카에(大杉栄)도 6살 된 조카와 부인과 함께 헌병대

에 의해 살해당했다.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켰다’, ‘혁명가를 부르며 집에 불을 지폈다’와 같은 근거 없는 유언비에 속은 사람들이 학살에 가담했다.

일본 정부는 관동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학살 증거를 은폐하고 사실을 부인해 왔다. 심지어 이를 비판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운동을 탄압하기까지 했다.

운동의 성장이 두려웠던 일본 정부

관동대학살은 일본 지배계급이 국내의 경제적·사회적 위기와 식민지에서의 저항을 억누르고자 일으킨 만행이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경제 불황으로 대중의 불만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하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을 통해 탄생한 소련의 존재도 운동의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일본 정부는 사회주의 운동을 자본주의와 천황제를 뒤흔드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도로 경계했다.

더욱이 1915년 대만에서 일어난 무장 봉기인 ‘타파니 사건’, 1919년 조선에서 일어난 3·1 운동 등 항일독립투쟁이 식민지에서 낱알이 늘어나고 있었다.

반식민 투쟁은 일본 제국주의 심장부인 도쿄에서도 일어났다. 3·1 운동 전부터 도쿄에서는 조선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항일독립운동이 벌어졌으며 3·1 운

동 이후에는 그 기세가 더욱 거세졌다.

1920년 이후에는 재일 조선인들과 일본인 사회주의자·아나키스트와의 접촉이 점차 늘어났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하고자 만든 ‘코스모구락부(コスモ俱樂部)’ 집회에는 매년 수많은 조선인이 참여했다고 한다.

식민지 해방과 일본인-조선인 간 연대를 호소하는 운동도 성장했다. 1922년 1월 코민테른이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극동민족대회에서는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가 가타야마 센(片山潜) 등이 참여해 식민지 해방을 지지했다. 또한 1920년부터 시작된 일본 메이데이 행사에는 일본인 노동자와 연대하고자 참여한 조선인들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22년 니가타현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일본인 노동자들에게 조선인 노동자와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벌인 최초의 ‘대중적’ 연대였다. 당시 발간된 “전위(前衛)”(사실상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였다)에는 ‘일선(일본과 조선) 노동자의 단결(日鮮労働者の團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일본의 노동운동이 선인(鮮人) 노동자와 굳게 손잡고 착취자에 대한 공동 전선을 확립하지 않는 한 일본 자본가들은 선인 노동자를 이용해 노동운동 전선을 교란시키려 할 것이다. … 무산계급인 우리에게 선인 노동자는 동료이자 형제이자 전우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싸워야 할 공동의 적이 있다. … 국경도 인종도 없는, 무산계급 입장에서 이 사건(니가타현 조선인 학살 사건)에 항의해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무산계급의 단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조선인·일본인의 연대가 확대되는 것을 위협으로 느낀 일본 정부는 법을 앞세워 점차 탄압을 강화해 나갔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인 1923년 메이데이 집회에 전례 없는 대규모 탄압이 이루어졌다.

메이데이 집회에서 조선인 사회주의자와 노동자, 일본인 사회주의자와 노동자 사이에 식민지 해방을 위한 본격적인 연대가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집회에 참가한 많은 조선인이 경시청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검거자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195명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관동대지진 학살의 전야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일본 도쿄도 스미다구에 위치한 관동대학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사진 출처: 100years-house.org

조선인을 보호한 사람들

그러나 험악한 상황에서도 조선인을 보호하고 도우려고 애쓴 일본인들이 있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 박해를 비난하고 조선인을 보호하는 것은 당시 일본의 사회주의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는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소규모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한 시기여서 노동계급에 영향력이나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지진 발발 후 지역 유력자들이 주민을 조직해 만든 자경단에 대항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자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노동운동을 이끌던 난카쓰 노동회(南葛労働会)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자 미나미 이와오(南巖)는 이웃 사람들의 상해를 벗어난 흥분을 진정시키려고 유언비어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한다.

이와오의 형이자 당시 사회주의자 학살 사건에서 희생된 요시무라 코지

(吉村光治)도 폭주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유언비어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설파하고, 재해방지조사회를 꾸리며 누구 하나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진력했다. 일상적으로 조선인과 교류하며 일정한 인간 관계가 있던 일부 일본인 중에도 자경단으로부터 조선인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일본 지배계급은 이런 일본인과 조선인의 새로운 연대가 두려웠을 것이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연대와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을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그런 연대의 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일제의 관동대지진 대응에서 사회주의자 탄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관동대지진이 발발한 직후 일제는 '불량한 상상을 가진 자'를 단속해야 한다며 '치안 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治安維持ノ為ニスル罰則ニ関スル件)'이라는 칙령을 만들어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다. 이 칙령이 바로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의 전신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8월 15일 윤석열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기시다 정부를 "파트너"라 불렀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도 종전기념일에 아시아에서의 전시 침략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관동대지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지사는 과거 매년 9월 1일 조선인 추도식에 보내던 추도문조차 2017년 이후 중단했다. 극우 인사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지사도 했던 소소한 위로마저 거부한 것이다.

현재 한일 양국의 지배계급은 이런 역사를 은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중을 죽음으로 몰고 갈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7곳을 한국 안보의 후방기지라 부르면서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찾는 국가 간 다툼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어느 시대나 재난은 (처음엔 자연재해

로 시작될지라도) 이주민이나 여성, 어린이 같은 약자를 필두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전쟁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우리는 노동계급이 국경과 인종에 관계없이 단결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질서라는 공통의 적에 맞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100년 전 사회주의자들이 호소했던 것처럼 말이다.

민간인의 학살 가담은 일본 국가와 자본가들의 분열 지배가 작용한 것

군부와 경찰 등 정부 기관이 학살을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하지만 일반 민중까지 이 학살에 가담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구한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당시 일본 국가가 국가주의와 군국주의를 일본인들에게 고취시키면서 의도적으로 민족 차별 의식을 부추긴 것을 주요한 배경으로 설명한다.

메이지 초기 정한론을 주창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국가주의와 군국주의 아래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우월감과 차별 의식을 국민에게 심었다. 나아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일본이야말로 문명 개화의 선진국이라는 우월감을 조성하고 조선인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차별하는 의식을 부추겼다.

정부와 함께 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대립을 심화시킨 것은 바로 자본가들이었다. 제1차세계대전 중 일본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일본 공산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급성장했다. 수요가 늘어난 방직, 직물, 석탄, 중공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메우려고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자본가가 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 정부가 시행

한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중국 간도 지방이나 일본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꺼리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 현장에 투입돼 차별적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제1차세계대전으로 찾아 온 호황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후 만성적 불황에 대응하려고 자본가들은 저임금 조선인 노동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했다.

일본인 비숙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일하던 영역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투입됨에 따라 그들을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 자본가들은 임금 하향 평준화를 목적으로 그런 질서와 경쟁을 부추겼다. 불황으로 살림살이가 파폐해진 상황에서 이런 민족 이간질은 더 활성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지진의 혼란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돌아올까 봐 일본 군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거나 '조선인이 방화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민족 간 증오를 부추기며 학살에 동원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즉, 일본 민중 일부가 조선인 학살에 가담한 배경에는 이윤에 눈이 먼 일본 자본주의와 그것의 또 다른 얼굴인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브릭스,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대안이 될까?

★ 니제르에서 자신의 동맹을 복권시키려는 서방 제국주의

★ 아르헨티나 10월 대선
새롭게 부상한 극우
하비에르 밀레이는 누구인가

KAL007 격추 사건 40년

쿠바 위기에 이어 또 핵전쟁 근처까지 갔던 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해 훨씬 덜 알려져 있지만, 1983년은 핵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해였다. 대한항공 소속 007편(이하 KAL기) 여객기 격추 사건이 미국·소련 간 핵 긴장을 극도로 높이는 계기가 됐다.

1983년 9월 1일 KAL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군에 의해 격추됐다. 한국인 81명, 미국인 55명, 일본인 28명, 중국인 36명 등 16개국 269명의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탑승객 시신은 끝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미국과 소련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며 사할린 상공에서 치열한 첩보전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KAL기 격추 사건을 두고 음모설이 난무한다. KAL기가 미국을 위해 첩보 비행을 하고 있었다. 탑승객들이 죽지 않고 사할린 어딘가에 살아 있다 등등.

그러나 KAL기 격추 사건은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증대해 온 미·소 간의 군사적 긴장이 낳은 참극이었다.

KAL기는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KAL기가 정상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두 차례(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상공) 진입했다. KAL기가 왜 예정 항로를 이탈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불운하게도 KAL기가 진입한 소련 영공 인근 지역은 미·소 간에 살벌한 군사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소련은 베링해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마주보는 캄차카반도에 해군력과 방공망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었다. 4개의 함대, 2400대의 전투기, 50만 명의 병력이 배치돼 있었다. 소련의 핵잠수함 발진 기지 페트로파블롭스크도 이 지역에 소재했다.

미국은 제7함대가 이 지역을 담당했고, 알류산열도·일본·한국에 해군 및 공군 기지가 있었다. 미국은 1983년 초 이 지역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군사적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미국과 소련은 치열한 첩보전을 벌였다. 특히 레이더망(전파탐지기)이 양국의 최대 관심사였다. 레이더 전자전의 핵심 수단은 인공위성과 정찰기였다. 미국은 이 장치들을 통해 소련 레이더 기지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다.



신냉전의 절정에서 벌어진 1983년 KAL007 격추 사건

KAL기와 비슷한 형태의 보잉기인 RC-135가 그런 첩보 임무를 수행했다. 사건 당일에도 RC-135는 KAL기와 비슷한 시간대에 교대로 캄차카반도를 비행했다.

미국의 첩보 활동에 예민해 있던 소련군이 예정 항로를 이탈한 KAL기를 미군 정찰기로 오인하고 격추했다.

애초 소련 정부는 KAL기 격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다 미국이 소련군 교신 감청 녹음을 공개하자(미국은 감청 사실을 감추려고 한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소련은 KAL기가 “스파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소련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격추시켰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러시아 정부는 KAL기 블랙박스와 전투기 조종사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며 오인 격추가 사건의 진상이라고 밝혔다. KAL기가 단순한 운항 실수로 예정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으로 들어갔는데, 소련의 대공부대 사령관은 KAL기가 첩보 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는 격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냉전

KAL기 격추 사건은 신냉전의 절정에서 벌어졌다.

냉전(1946~1991년)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과 소련이 산업을 재조각하고 새로 손에 넣은 지역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대립하던 시기였다.

1970년대에 일시적 해빙기(데탕트)가 있었지만, 1980년대에 제2의 냉전(신냉전)이 시작됐다.

1981년에 집권한 미국의 로널드 레

이건 정부는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려고 했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이렇게 말했다. “핵 억제가 실패하면 미국은 전면적인 핵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최종적으로 생존해야 한다.”

1983년 3월 8일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고, 그 2주 뒤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했다. 소련의 핵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소련은 “소련과 그 우방에 대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소련은 필사적으로 미국의 핵 공격 신호를 감지하려고 했다. 소련과 동유럽의 첩보원들이 서방의 군대 이동, 무전 통신, 고위급 정치인과 장교들의 하루 스케줄, 병원의 긴급 대처, 현행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작전명 ‘RYAN’).

이런 상황에서 KAL기 격추는 레이건의 대소 강경 입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 줬다. 레이건은 반소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벌이며 군비 증강에 나섰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상원 외교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소련 조종사가 문제의 비행 물체가 민항기인 줄 몰랐다고 보고했는데도, 레이건은 소련이 민항기임을 알고도 격추했다고 비난했다.

KAL기 격추 몇 시간 만에 국무부 장관 조지 슐츠를 비롯한 레이건의 각료와 보좌관들은 이 사건을 신형 핵 미사일 퍼싱2의 유럽 배치를 위한 명분으로 삼는 논의를 했다. 얼마 뒤 퍼싱2가 유럽에 배치됐다.

또, 레이건은 KAL기 격추 사건을 이용해 1875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소련 관료들은 KAL기 격추 뒤

미국이 선제 핵 공격을 할까 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유리 안드로포프는 양국 관계 개선의 “환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소련 관료들을 특히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격추 두 달 뒤인 1983년 11월 2~11일 실시된 나토의 대규모 군사 훈련 ‘에이블 아처 83’이었다. 이것은 핵전쟁 대비 훈련이었다.

소련 관료들은 이 훈련이 자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 KGB(소련 국가보안위원회) 지도부는 전 세계 각 지부들에 미국의 핵 기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긴급 훈령을 내렸다. 그리고 중거리탄도미사일 SS-20을 한국·일본·중국을 겨냥해 동진 배치했다.

소련 관료들은 아예 자신들이 핵 공격 선수를 칠까도 고려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미·소 간의 핵 긴장은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쿠바 위기에 대해서는 본지 436호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 문턱까지 갔을 때’를 보시오.)

2021년에 공개된 미국 국무부의 기밀 문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핵전쟁의 나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핵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자 영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반핵 군축 운동(CND)이 크게 일어났다.

천만다행으로 핵전쟁은 간신히 피했다. 미국과 소련 지배자들은 핵전쟁으로 공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전쟁광 헨리 키신저는 레이건을 만나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극도의 절제력을 보이”라고 권고했다. 안보 담당 보좌관 로버트 맥팔레인은 소련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레이건은 미·소 간 외교 관계 단절이나 군사 행동 고려 등의 강경책이 아니라 소련의 사과와 희생자 보상 등을 요구했다.

소련 외무부 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도 “현재 세계의 제일 큰 문제는 핵전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983년은 핵 공포의 균형에 의한 평화 유지라는 것이 너무나 취약하고, 미·소 양국의 우발적인 확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김인식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

원주의 한 초등 교사

9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서이초 교사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괴로워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8월 23일 까지 전체 교사의 절반 이상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 내가 행동 참여를 제안하며 동료 선생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신규 발령이 난 10년 전에도 그 지역에서 목숨을 끊은 신규 교사가 한 명 있었다. 비록 언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언론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널리 알려졌지만, 그 전에도 교사들의 죽음은 여럿 있었다. 이번 계기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널리 알려지고 변화가 생기면 좋겠다.”

나 또한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여기에 덧붙여, 교사들의 행동이 학부모를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싶다. 서이초 교사가 과도한 업무뿐 아니라 ‘악성 민원’에도 고통받았지만, 이 문제를 학부모와 교사의 권리 대 권리, 법적 해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교사 개인에게 책임 떠넘기는 시스템을 바꾸려면 교사들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법적인 해결로만 접근이 이뤄지면서, 교육적 해결은 무척이나 어려워졌다는 데 교사들의 공감대가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히 학생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고 대화하며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법적 해결에만 몰두하면서 자신만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쌍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중간에 끼인 교사에게 학부모가 “한쪽 편만 든다”는 불만을 갖고 ‘악성 민원’을 넣는 일도 종종 생긴다.

‘악성 민원’ 문제도 법적 해결 문제로만 접근하면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

모의 불신만 키우고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소외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 소외를 엉뚱한 데 화풀이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 대상이 교사가 됐을 때 그 화풀이를 교사 한 명이 혼자서 오롯이 받아내야만 하는 현 교육 시스템이다.

게다가 ‘악성 민원’이 있는 학급의 경우 학급 내 다른 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시스템적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 노동자들의 총원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다.

또 다른 동료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

도 기억에 남는다. 날이 갈수록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많아지는데, 지금의 학급당 학생 수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고 어려운 행동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고 담임 교사가 전문 상담 교사, 동료 교사 등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과도한 업무든 ‘악성 민원’이든, 인력 총원과 처우 개선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대안이 더 많이 이야기되고,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에 더 많은 교사가 동참하길 바란다.

▶ 16면에서 이어짐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은 정당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우 미흡한 대책만을 내놓고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자 많은 교사는 주말 집회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지금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재량 휴업, 연가, 병가 등의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월 24일 기준으로 이미 7만 명을 넘었다. 전체 50만 교사의 14퍼센트가 넘는 숫자다. 328개 학교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사의 파업이 불법인 한국에서 정부의 탄압을 무릅쓰고라도 단체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교사가 이처럼 많은 것은 교사들의 불만과 저항 의지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교사들의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교육부는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 그리고 재량 휴업을 결정한 교장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위협도 나오고 있다. 보수 교육감인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수업을 멈추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9월 4일 교사들의 행동 계획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금껏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사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정부와 교육 당국이

또다시 별 볼 일 없는 대책이나 내놓으며 교사들에게 참고 있으라고 하니 교사들은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9월 4일 재량 휴업 추진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9월 4일에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금껏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임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책임이 있다. 서이초 교사 죽음 후에도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실효성 있는 인력·재정 지원 방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8월

19일 집회 때 연단에 올랐다가 교사들의 거센 항의와 야유를 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 교육감들의 이런 발표는 9월 4일 행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9월 4일이 다가올수록 ‘공교육 멈춤의 날’을 비난하는 정부와 우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정부의 징계 위협도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단 하루뿐일지라도 단체행동으로 힘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도록 만들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9월 4일 행동에 더 많은 교사가 참가해야 한다.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 처리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강동훈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화,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등. 교사들은 부족한 대책에 반발해 왔지만 개선된 게 없는 것이다.

물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시작될 때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대책은 교육환경 개선에 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사들을 계속해서 갈등과 분란에 빠트릴 공산이 큰 방안들이다.

예를 들어, 교장 직속으로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안은 그대로 들어갔다. 교사와 공무원·공무직들이 많은 우려를 표했음에도 말이다.

수업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학교장이나 민원 대응팀이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결국은 행정실을 거쳐 교사에게 민원이

전달되는 것에 그칠 것이다.

오히려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교사와 다른 공무원, 공무직 사이에 업무 분담을 둘러싼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이미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들은 교사의 민원 업무까지 떠맡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반발을 의식해, 정부도 민원 대응팀을 2학기에는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을 미룬다고 한들 개선책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정부는 법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악성 민원 학부모에게 특별교육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과 과태료 부과 위협으로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법으로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등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그것이 정말 '악성' 민원인지, '정당한' 생활지도권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제도를 도입해도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성 민원이라는 것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떤 게 악성 민원인지 골라 내는 것은 가능치 않다. 결국 교사들의 부담을 얼마간이라도 줄이는 길은 교사와 행정 인력 등을 늘리는 수밖에

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수정과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교사들이 학내 갈등만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교육 재정과 교원 인력 확충도 모두 외면하던 정부

가 몇 가지 법을 개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교사들의 고통을 염려해서가 아니다. 재정을 늘리지 않고 또다시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려 할수록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과 분란만 커질 것이다.

갈등만 키우는 생활지도 고시안

정부는 생활지도 고시안(이하 고시안)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구체화돼 부담 없이 교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학내 갈등을 키울 문제투성이 방안이다.

예를 들어, 고시안은 긴급한 경우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가 체벌인지를 놓고 논란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방안도 학생을 낙인 찍는 효과만 내고 교육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일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는 학생을 분리하고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분리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학생과 상담할 인

력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담 인력 충원 방안이나 별도 공간을 위한 예산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칙에 따라 핸드폰 등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억압적 교육 환경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다시 강화하며 엄벌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학생의 반발심을 키우고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만 키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인력 확충 등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옥스퍼드 대학교 존 패링턴 교수 초청 강연

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9월 4일(월) 오후 8시

발제 존 패링턴
옥스퍼드 대학교 세포/분자약리학 부교수
인간의 뇌와 의식 연구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검색